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뭘 담았나

버스·화물차 유가 인상분 50% 돌려준다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날 아침 열린 고위당정에서 협의한 고유가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잉여금·지방교부세 재원 활용

경유 사용 서민·자영업자 집중 지원

■ 고유가 대책 문답

8일 발표된 정부의 민생대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서민 지원에 집중돼 있다. 주요내용을 문답풀이했다.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나.

▲재정적 지출에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천억원과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5조4천억원을 활용하면 전액 충당가능하고 유가환급 부문은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대 3조2천억원, 세원 투명성 등에 따른 자연증수분 2조원으로 충당된다.

-지원 대상과 내용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저소득층, 농·어민, 화물차이다.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빼기 전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인 경우 최고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농·어민과 화물차는 기존에 유류세 면세나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절반 정도 보전해준다.

-저소득층 연탄 지원대책은.

▲연탄을 쓰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쿠폰을 지급하면 사용자는 쿠폰으로 연탄을 구매하고 향후에 정부가 정산해준다.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환급 절차는.

▲유류구매 전용 카드로 실시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 구매시에 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다음달 15일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는 주유소에 결제일 이틀 후에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결제해주고 국세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카드사에 세액을 환급해준다.

-왜 경유에 지원이 집중되나.

▲ 저소득, 서민, 자영업자 계층을 선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유 차량의 43.9%가 화물용 차량이고 경유의 20%가 난방과 산업용으로 쓰이는 등 경유는 서민이나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연합뉴스

유류세 연동 보조제 유지… 1t 이하도 환급

■ 버스·화물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화물차 운전자들은 다음달부터 경유 가격이 오르면 인상분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경유가 인상으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대중교통·화물차 업계에 유가 환급금 지급을 확대하고 유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년 동안 경유가격 상승분의 50%는 환급금 형태로 지원된다.

지급 대상에는 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등 버스업계와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이다.

경유 기준가는 5월 4주 평균 가격인 1천877원을 참고해 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경유값이 급격하게 올라 환급금이 급증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급금 상한선을 ℓ당 476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t 이하 자가 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차·경승합차처럼 유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10~25t 화물트럭 운전자들이 주축이 된 화물연대가 요구해온 경유가 인하, 표준요율제 시행, 운송비 현실화 등은 이번 대책에 빠져 있어 조만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이들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초수급자 86만가구에 월 2만원씩 지급

■ 근로자·저소득층은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유가 환급금을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유류비 증가 부담의 절반 정도는 덜게 됐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2만원 수준을 지급하며 연탄보조 대상도 차상위 가구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모두 10조4천9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환급금은 1년만 지급하고 유류세 인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에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 통상 받는 월급총액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인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는 24만원, 3천만~3천600만원은 3개 구간으로 나눠 18만원, 12만원, 6만원을 각각 받는다.

환급금 지급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로자가 속한 회사를 통해 일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2차례 지급하되 희망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86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투자비 세액공제율 20%로 높이기로

■ 에너지절약시설은

정부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장기적인 에너지기반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 2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석유공사를 대형 자원 개발 전문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6천억원의 추가 출자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고유가에 따른 버스운행료 부담을 덜기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구입비용의 일부(대당 2천2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50%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99억원을 추가로 보조해 1천327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20%로 늘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대상시설은 에너지절약형시설과 중유재가공시설, 절수설비,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으로 1천억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형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투자금에 대한 융자를 1천억원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며 신규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안에서도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 설치에 100억원을 보조키로 했다.

4~5년전 가격 기준 고수위해 세금 인하 못해

■ 100대 85 포기 왜?

8일 고위당정회의 결과 나온 고유가 대책이 경유값 급등 부분을 많이 반영하긴 했지만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정부 약속대로 100대 85로 해달라는 경유 사용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비율은 과거 국내 경유값이 휘발유가에 비해 많이 낮았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국제 경유가격이 휘발유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4~5년전 상대가격 기준을 고수하기 위해 세금을 인하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기준이 지난 2004년 에너지세제 개편시 유종간 수급 불균형을 맞추고 환경문제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상대가격을 기준으로 유종간 세금을 조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이 계획은 지난해 7월 이미 완료된 것이고 최근 국제 경유가격도 많이 올라 OECD 국가평균도 지난 3월 기준으로 100대 96까지 조정됐기 때문에 에너지 상대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세금을 조정해 이 비율을 유지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도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834원인 반면 경유는 637원으로 200원 가까이 낮은 점도 경유세금 인하를 막는 요인이 됐다. /연합뉴스